기 고

칼 럼



의혹의 시대, 국민은 더욱 힘들고 화난다

김유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요사이 '단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로 번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모든 이슈를 빨 아들이는 불랙홀이 되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판교) 29만평에 5684가구를 지어 분양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4년 당시 성남시장으로 이 사업을 설계한 이 재명 경기 지사는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한 최대 치적'이라고 했지만 특혜 의혹은 여야 정치 권, 법조계, 언론계까지 강타한 뒤 검찰로 넘어갔 다.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나오는 의혹들이 그 끝 을 알 수가 없다.

2년 가까운 장기간의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팬데믹)으로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이제 '살려 달라'는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 다. 밀린 임대료와 은행대출 이자, 생활비 등에 막다른 골목으로 쫓겨서 한 가닥 희망의 끈 마저 놓아 버리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있다.

작년 4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손준 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황희석·최강욱 당시 열린우리당 비레대표 후보와 유시민 노무 현재단 이사장, 언론사 관계자 등 11명을 고발해 달라는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부장검사 출신)에게 전달했고 김웅 후보는 이를 당에 전달 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희 한한 사건으로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불 난 집에 기름 붓듯이 천문학적인 돈이 거래 된 대장동 개발 의혹이 터진 것이다. 하루 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서민들의 절박한 처지를 비웃 고 약이라도 올리려는 건지, 5천 억의 부동산 개 발 투기 이익을 끼리끼리 몇 백억, 몇 십억씩 나 누어 먹었다는 대장동 의혹이 터졌다. 알바 얻기 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2030 청년들은 별 나라 이야기를 보며 쓰디쓴 허탈과 분노를 삼키 고 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충돌하 고 있다. 여당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 직금 50억원, 월 1,500만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 은 초호화 고문들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다면 서 '국민의힘 게이트' '국민의힘발(發) 법조 게이 트'라고 부르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 대리(기획본부장)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 명한 측근 유동규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재명이 몸통', '이재명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 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전후로 권순 일 당시 대법관을 여덟 차례 만났고, 권 전 대법 관은 당시 이 후보의 무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퇴임 이후엔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윤석 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부친 소유 연희동 단독

주택을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명옥 씨(천하동인 3 호 사내 이사)가 2019년 4월 19억원에 매입하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다.

관련된 회사들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주)화천 대유 자산관리, 천하동인(주), 성남의뜰(주), 유원 홀딩스 등 복잡하게 얽혀 있고, 차명(借名)으로 숨는 등 수수께기 같은 돈 따먹기 복마전(伏魔 殿)이다. 특별검사, 검찰총장, 대법관, 국회의원, 검사장 등 힘 있는 사람들 끼리끼리 해 먹는 비 리 카르텔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충격과 분노 속 에서 지켜 보아야만 할 것인가. 국민들의 절망적 인 박탈감을 누구 있어 풀어줄 것인가.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은 정권의 애완견이어 서 믿을 수 없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더 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만 판치는 특검은 반대하 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여야, 신분, 지위 여 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대선 판세를 흔들고 있는 대장동 의혹은 정치 권과 유력 대선 후보들까지 얽히고 설켜서 롤러 코스트를 타는듯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 다. 외줄타기 묘기를 보는 아슬아슬한 감마저 있 다. 국민들은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와 정치권의 대응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실망과 분노가 쌓이고 쌓여 어느 계기가 되면, 민중은 배를 뒤집 어 버리는 성난 해일(海溢)이 될 것이다.

가을 산을 즐기는 가장 안전한 방법

김창수 여수소방서서장

시원한 바람 탓에 아침, 저녁 '가 을이 왔다'는 것을 느낀다. 높은 파 란하늘과 초록빛이었던 나뭇잎들 이 형형색색 붉은 단풍 옷을 갈아 입는 가을의 산은 일년 중 가장 아 름다운 산을 볼 수 있다.

신선한 바람과 아름다운 산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으면서 그에 따른 사고도 빈번 히 발생하고 있다. 여수에서는 작 년 가을철에 가장 많은 산악사고 (35.2%)가 발생하였다.

본적인 안전수칙은 알고 등산을 해야한다. 산이 주는 아름다움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 몇 가지 만 알아보자.

첫째, 산행 전 기상정보 파악은 필수이다. 일몰시간과 기온 등을 사전 확인하여 일몰 2~3시간 전 하산을 해야한다.

둘째, 등산 전 가벼운 준비운동 을 통하여 근육을 이완시켜준다.

셋째, 나의 체력과 능력에 맞는 등산코스를 선정하고 나홀로 등산 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높은 곳으 로 올라갈수록 산이 주는 모습이 다양하여 욕심을 내어 올라가지만



피로가 축 적되어 부 상의 위험 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사 고를 대비

해 등산로

에 설치된 산악위치 표지판 등 이정표를 파 악하고 등산 중 자신의 위치를 실 시간 확인한다.

다섯째, 사고가 발생하면 탈수. 저체온증이 올 수 있다. 보온이 가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 능한 등산복을 준비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해 보온을 유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사고로 출혈이 심할 경우 출혈부위를 수건 등으로 압 박해 지혈하고 골절시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골절 부위를 고정해 야한다.

사고는 갑자기 생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어난 사고는 적절한 대처를 해야한다. 코로나 로 실내운동에서 등산으로 취미를 바꾸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등 산인으로서 가장 기본인 안전수칙 을 준수해 가을날씨를 마음껏 만 끽하길 바란다.

온라인 그루밍의 백신, 위장 수사

서 영 진 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작년 한 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텔레그램 n번 방 사건'이나 '박사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의 가해자들은 sns나 채팅 앱 등 온라 인 매체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호감 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거나 성적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여 성 착취물 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아주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성 착취 목적의 접근' 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예방적으로 필요하다 는 지적에 따라 강간·성 착취물 제작 이전이더라 고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으로 대화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 밍" 성범죄도 처벌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일부 개정하면 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도록 명확히 하였다.

또한 재작년 11월, 당시 'n번방 사건'을 보면 수사하던 경찰관이 공유방에 잠입하려 하였으나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 히 신분을 가려 입장시키며 추가 인증을 요구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경찰관이 디지털 성 범죄사건 수사를 할 경우 ▲신분비공개 수사·신 분위장수시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신설했다.

신분비공개수사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숨기 고 성 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죄자에게 접근 하여 증거 등을 수집하는 수사를 의미하고, 신분 위장수사란 신분 비공개를 포함 문서·전자기록



기고 등의 작성 및 행사로 가상 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수사를 말한다.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 다면 이러한 디지털 성 범죄를 해결하는 데 더 숙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장수사는 함정수사의 성격도 일부 지니고 있어 적법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신분 비공개수사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상급 경찰관 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분 위장 수사를 진행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가 필 요한 만큼 통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음지에서는 지금도 범죄 에 노출된 미성년자들이 많을지도 모른다.

모든 백신이 바이러스를 100% 예방할 수는 없 지만, 이번 아청법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에 보다 많은 효과를 가지길 기대해 본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 고장신고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광주남성의전화 673-9001 ▲광주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123

383-0019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호 편집국장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